

민주 지방선거 모드...광주·전남 공천작업 돌입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가동...직무능력 등 심층 평가 평가 결과 내년 1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를 가동하는 등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공천작업에 돌입했다. 평가위는 민주당 소속 현직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의 직무나 공약이행 등을 평가하고, 민주당은 이를 공천 자료로 활용한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형석)은 지난 31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1일 공식 출범하고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들의 세부적인 평가 작업을 한다”고 밝혔다.

11월 말까지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 의원들은 자신의 활동 내역을 평가위에 제출하게 되며, 오는 12월 13일까지 평가위 위원들은 이를 토대로 평가 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평가 대상자는 총 4명(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이며 각 800명의 여론조사와 함께 직무활동 분야, 공약이행 분야, 자치분권활동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광주지역 광역의원(12명)과 기초의원(28명)의 경

우 의정활동 분야와 지역활동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며 광역의원들은 상호 간다면 평가도 추가된다.

광주시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조선대 대학원장을 역임한 황인창 교수가 위원장을 맡게 되며 총 11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됐다. 평가실무지원단은 이재중 광주시당 정책미디어실장이 맡는다. 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단체와 직능단체의 전문가 추천을 받아 외부인사 9인, 내부인사 2인으로 구성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2일 오전 조만형 동신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선출직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일정과 방향, 계획 등을 논의한다.

평가 대상은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로 기초단체장 14명, 광역의원 29명, 기초의원 145명 등 총 188명이다.

위원 명단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평가위원들 서로 간 평가내용 열람도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됐다. 평가결과는 내년 1월께 구성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관될 예정이다.

평가위는 청렴도, 직무수행능력, 공약이행률, 지역민 여론조사, 다면 평가 등 분야별로 점수를 합쳐 하위 20% 선출직 공직자와 광역·기초 의원은 향후 공천 과정에서 패배티를 받는다.

/박정욱·오광록기자 jwpark@

‘맹탕국감’ 종료



“줄을 서시오~” 국감조사 마지막날인 지난 31일 오전 국회 의원실이 국감에 참석하는 피감기관 관계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20일간 대장정 마무리...이달부터 예산·법안 심사 착수 野 합당설·보이콧에 동력 상실...대형 이슈 없이 폭로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감사가 지난 31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결입 상임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국감을 이날부터 종료하고 11일부터 예산안·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이번 국감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정쟁만 있고 민생은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우선 청산해야 한다는 여당의 ‘적폐’ 공세와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을 ‘신적폐’로 규정하는 보수야당의 역공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이라는 파국을 불러왔다. 이렇다 할 파괴력을 가진 대형 이슈가 등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난무하는 폭로

를 붙이면서 여야 간에 험한 말이 오갔다. 특히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이 문제로 정회까지 하는 등 곳곳에서 국감이 공전을 거듭했다.

더욱이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석이사 2명을 선임하자 한국당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 막바지 국감이 결국 ‘반쪽’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한국당은 지난 30일 종합감사부터 국감에 다시 복귀했지만, 파행으로 일관된 국감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는 힘들었다.

무분별한 증인 신청과 불출석 관행 역시 그대로였다. 올해 처음 실시된 증인실명제 도입으로 일반인 증인 신청수는 지난해 251명보다 줄어든 227명으로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200명을 웃돌았고, 출석률은 오히려 70%대로 떨어졌다.

한편, 예산·입법국회 주도권 잡기에 나선 여야는 사실상 마지막 국감일인 이날도

법사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각각 ‘적폐 청산’과 ‘신(新)적폐 저지’를 내세우며 난타전을 펼쳤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오후 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여야는 각각 ‘언론 개혁’과 ‘방송징역’을 주장하며 격돌했다.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감사에서는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취업 특혜 의혹을 다시 추궁하면서 여야 의원 간 말다툼이 벌어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국정교과서 문제와 정부의 교육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북한에 나포됐다 귀환한 ‘39기흥진호’ 사건이 쟁점이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브리핑

천정배 “5·18 유족 의료급여 중단 시정해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31일 “보건복지부가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5·18 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에 대해 지급되던 의료급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이는 복지부의 일개 지침으로 국회가 제정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을 무력화한 위법적 조치다. 즉각 의료급여 기준을 개정하고 미지급된 금액을 소급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천정배 의원에 따르면 현행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은 5·18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012년 까지 의료급여 적용대상을 사망자(상이자 사망 후 포함)·행방불명자의 가족, 상이자와 그 가족, 구속자로 규정하고 상이자 사망 후 그 가족에 대해 의료급여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의료급여 기준을 정

하면서 ‘지난 2012년 감사원이 일부 국가유공자가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을 빌미삼아,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5·18보상법의 적용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수급자 사망 시 가구원 모두에 대해 자격을 중지하도록 ‘의료급여 지원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의 지침에 불복한 ‘의료수급 기준’ 변경으로 5·18 보상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는 게 천 의원 지적이다. 박근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천 의원 지적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수급자 사망의 경우에도 가구원 모두에게 의료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겠다. 과거 미지급된 금액 부분도 지급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형호기자 khh@

조국 민정수석 “부산시장 출마 안한다”

“대통령 보좌 전념” 지방선거 후보 거론 선긋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부산시장 출마설을 부인했다.

조 수석은 지난 3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누차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밝혔음에도 근래 여러 언론에서 저를 부산시장 후보로 계속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앞에는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완수해야 할 관계가 산적해 있다”며 “향후 오로지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데 전념

하고자 함을 재차 밝힌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선 그동안 진보성향의 법학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중 민정수석에 발탁된 조 수석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고향인 부산에서 시장직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해 왔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지난 30일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전남지사 출마설을 부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늘 바른정당 ‘의총’에 쏠린 눈

한국당과 통합 놓고 마지막 토론

분당(分黨) 초임기에 들어간 바른정당이 1일 의원총회를 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 20명은 이날 의총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마지막 토론을 벌인다. 통합파 의원들은 그동안 당내 당 통합이 끝내 불발되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31일 이후 탈당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이 의총은 자강파와 통합파 간의 막판 공개 충돌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강파는 모두 2~3명에 달하는 중립 지대 의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이

다. 특히 한국당의 인적정산 속도가 지부진한 만큼 애초 통합의 명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통합파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놓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통합파는 한국당의 진박(진박근혜) 청산 의지가 충분히 확인된 데다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 극에 달한 만큼 하루빨리 보수야당이 문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지막까지 한명이라도 탈당 대열에 동참시키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자강파와 통합파 의원 규모는 각각 8~9명으로 팽팽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박사통합	석사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사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A.)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영산리작소로 36